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및 토론회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도 결국 철학이다-문재인 정부 경제철학 비판' 토론회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文정부, 철학 없는 경제정책에 사회 방향성 밑동부터 흔들려”

‘경제도 결국 철학이다’ 토론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

“과거우리가 사회주의·공산주의 세력과 총을 든 전쟁을 했다면, 이제는 그 전선이 경제로 확대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도 결국 철학이다-문재인 정부 경제철학 비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가의 경제정책은 이념과 철학에서 나오며, 그 철학이 정책의 방향성을 이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방향성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을 맡은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정부는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등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구했다”며 “현 정부는 결과적 평등이 가능하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 평등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보이지

만 결과적 상향 평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20세기 공산주의 실험으로 증명됐다”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과실이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공정한 것이며 결과적 평등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현 정부는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려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유재산제는 개인들 간의 분쟁을 줄여 거래비용을 축소하고 자산의 시장가치가 가장 높게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새로운 교역 기회를 발견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경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하고 있으나, 시장경쟁이 없던 시대에는 도리어 신분·학벌·출신이 강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이테크 등 과거 여러 철학자들이 강조했듯이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절차”라며 “공정한 경쟁은 사회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

與 ‘인력 모으기’ vs 野 ‘인프라 개선’

산업단지 살리기 나선 정치권

더민주 박정 의원
‘청년인재 유입’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도로·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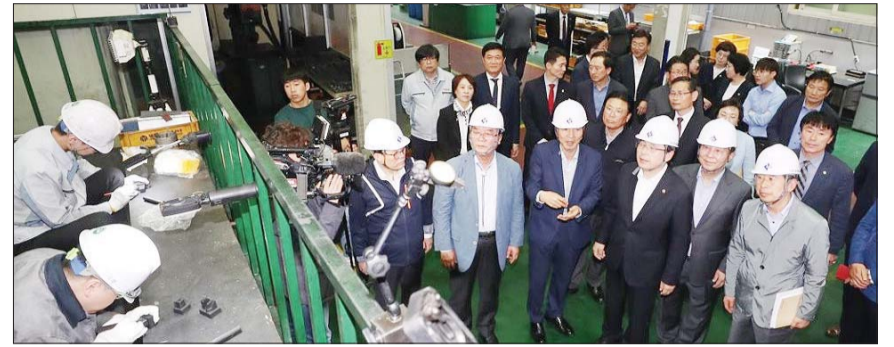
불경기와 고용 악재에 여야가 ‘산업단지 살리기’에 나섰다. 여당은 청년층 등 인력 끌어모으기, 야당은 기반시설 개선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11일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국회에 계류한 산업 입지·집적 관련 법안은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최근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념을 산업단지 환경개선까지 확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는 국가·지역경제 핵심기반으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산업단지가 기반시설의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됐고, 현재는 회색빛 인상으로 우수한 청년 인력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젊은 인력의 유입감소와 생산인력 고령화로 국가경제 핵심거점인 산업단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를 청년 인재가 모이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목표다.

‘기업 살리기’는 보수권이 적극적인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지난달 9일 오전 울산시 북구 매곡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한국몰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모양새다.

먼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준공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의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이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녹지 시설·공원·주차장 등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해당 노후 산업단지 대부분이 고밀도 개발에 따른 활동인구 급증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 출·퇴근과 물류운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재생사업 지원만으로는 산업단지 내 도로망 확장과 교량 확충 등 교통량을 분산할 인프라 설치에 한계가 있다.

백 의원 개정안은 해당 단지의 도로·교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반 시설·시설물을 조성·확충하는데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한다.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4차산업혁명에 맞춰 산업융합플랫폼(공공융합 기술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하지만 산업 간 융합과 연결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확산해야 하는데 구축할 법안이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에 산업융합플랫폼 구축·이용 활성 촉진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 개발·연구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등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1~34위 그룹 중 15개 그룹의 전문경영인과 만나 간담회를 하기 전 기념촬영을 마치고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재정사업 자체평가

목표 7개 중 2개만 달성 ‘실적 저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추진한 재정사업을 자체 평가한 결과, 목표 달성도가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담겼다.

성과보고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 중 하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앞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성과 목표·실적을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재정사업 관련 ▲경쟁제한적 행태와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결산액 150억원)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결산액 13억원) ▲소비자 권익과 역량 증진을 통한 경제활력제고(결산액 497억원) 등 3대 전략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공정위는 목표와 관련한 총 7개의 성과지표를 개발해 자체 평가했지만, 2개만 달성하고 5개는 달성하지 못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달성도는 28.6%에 불과하다.

달성도는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상당한 저조한 수준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100%(달성 3개), 국민권익위원회 100%(초과달성 1개·달성 1개), 금융위원회 66.6%(초과달성 1개·달성 7개·미달성 4개), 국가보훈처 61.5%(달성 8개·미달성 6개) 등이다. /석대성 기자

대통령 곧 재개된다 vs 원론적 얘기 통일장관

6월 남북정상회담 시기 엇박자

靑 “이달 중 회담성사 어려울 듯”
文 대통령 “대화 모멘텀 유지 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4차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놓고 여권 중심부에서 엇박자 발언이 나왔다. 남북정상회담 주인공인 문 대통령과 남북협력에 총괄하는 통일부 수장 김연철 장관이 엇박자 발언의 주인공. 문 대통령은 “곧 재개된다”며 정계 일각에서 제기한 ‘6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힘을 실은 반면, 김 장관은 “6월 남북정상회담은 원론적 차원의 얘기”라며 확대해석을 차단한 것. 여권 중심부에서 나온 남북정상회담 시기 엇박자 발언은 여론의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제4차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4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때 등장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 북미 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



문재인 대통령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점을 찾지 못했다. 즉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것은 ‘북미 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중재 행보인 셈이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진행되는 회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정상회담은 3차례(작년 4·27-5·26-9·19) 진행된 바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하자 정계에서는 ‘6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정인 대통령직속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 때 “북한이 결단을 내릴 때”라며 “만약 6월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뿐인가. 범여권 성향인 박

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지난 4월 16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물밑접촉 및 특사 교환 등을 통해 최소 6월까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권 중심부에서 ‘6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관련 여론의 혼란을 유발하는 발언이 나왔다. 통일부 수장 김 장관은 지난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여권 안팎에서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지난 1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6월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열릴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한-핀란드 정상회담 후 진행된 기자회견 때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고, ‘남북간-북미간 대화의 계속’을 위한 대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만간 남북간-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김 장관과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과 궤를 달리 한다. /우승준 기자 dn1114@